

‘호남의 역사’ 광주 근대건축물 보존 방안 시급

이홍일 시의원 주장...옛 광주여고·옛 조흥은행 건물 사라져 전남방직·수창초교 등 관광자원 가치 커 보호 로드맵 만들어야

‘호남의 역사’인 광주지역 근대 건축물들이 줄줄이 헐리고 있어 근대 건축물 보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제국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미군정에 이르기까지 근대 문화의 집약체이자 영욕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유산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시의회 이홍일 의원(민주·동구1)은 12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274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역사와 전통을 무시한 채 구도심 재생의 핵심자원이 될 근대건축물들이 줄줄이 헐리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근대건축물보

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가 그동안 50년 이상 된 근대건축물 등 문화자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도 문화재등록·활용방안 등 근본대책은 세우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옛 광주여고는 1923년에 개교한 유서깊은 건물이고, 옛 조흥은행은 1943년도에 건립한 호남권 최초의 민족은행으로 호남은행의 맥을 이어온 건물이지만 사라졌다”면서 “대한제국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미군정에 이르기까지 근대문화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유산들이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의원은 “광주시가 지금이라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광주지역에 남아있는 근대건축물 중 관광자원으로 보존 가치가 크고 교육자원들로 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근대건축물 보존에 관한 보호·관리 로드맵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의 지적처럼, 광주시 동구 장동에 위치한 옛 광주여고 건물도 최근 철거됐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부속한 주차장을 외곽에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1923년에 개교해 조만간 100년 역사를 맞이할 유서 깊은 건물이었다. 또 1943년 12월 건립된 호남권 최초의 민족은행인 호남은행의 맥을 이은 총장로 5가 옛 조흥은행 건물도 최근 매각돼 개발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은 아파트 개발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고, 학생 수가 급감하는 중앙·계림·수창 초등학교와 전남여고 등도 언제 철거될 것인지 그 운명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 밖에도 근대 건축물은 광주 곳곳에 널려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보존 및 활용 대책 없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에야 용역을 발주해 도시재생 거점 시설물을 조사했으나 광주여고 건물은 여기에서도 제외됐다.

이 의원은 “구도심 재생의 핵심 자원이 될 광주 지역 근대 건축물들이 줄줄이 헐리고 있는 것은 광주시가 도시의 자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역의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 관광 산업을 활성화 한 군산 등지의 성공 경험을 서울 삼아 지금이라도 광주의 근대 건축물을 지키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민 개인소득 17년째 전국 ‘꼴찌’

1490만원...민간소비 최하위 지역소득 외부유출 악순환

전남도민의 개인소득이 17년째 전국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회 김기태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12일 전남도 경제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내 소득 유출로 인한 부의 불균형한 분배, 수도권과 불평등 심화 등 소득분배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남도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이 통계청 ‘2016년 지역소득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2016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1년 단위로 일정 지역 내 새로이 창출된 최종생산물가치의 합)은 전국 평균 3200여만 원을 상회한 3800여 만으로 울산·충남에 이어 3위였지만, 정부와 기업소득 등을 제외한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평균인 1760여만 원을 밑도는 1490여만원으로 17년째 꼴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시도별 개인소득은 서울·울산·경기 순으로 높고, 강원·경북·전북 순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광주는 10번째로 낮다.

또 전남은 1인당 개인소득과 함께 민간소비도 전국평균 1560여만 원을 밑도는 1350여만 원으로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최하위로 저소득이 저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적 악순환 구조에 처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전남은 여수국가산단, 울산산단, 대불산단 등 대형 산단이 있어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으나, 개인소득은 17년째 전국 꼴찌”라며 “전국 일자리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속해 있고 기업 본사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지역소득이 유출돼 소득이 제일 낮은 곳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역소득 유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관용차 교통법규 위반 5년간 730건

과태료 3000만원 넘어

광주시 관용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5년간 730건에 낸 과태료만 3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시의회 김용집(민주·남구1)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관용차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4년 89건, 2015년 204건, 2016년 146건, 2017년 178건, 2018년 9월 기준 113건이었다.

이 기간 과태료 부과 액수는 3280만원에 달했다

업무시간 외 밤과 새벽 시간대 적발된 건수는 2014년 11건, 2015년 14건, 2016년 8건, 2017년 14건, 2018년 11건

이었다.

전체 부과 건수 중 공무 수행인 점 인정돼 과태료가 면제된 경우는 66건(9.4%)에 불과했다. 대부분 업무시간 외 차량을 이용했거나 공무 수행 중인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차량 관리도 부실해 관리비 명목으로 이 기간 19억6000만원이 편성됐으나 6억5000만원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업무상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는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고된 취업의 길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18 삼성(전자계열) 협력사 채용한마당'에 구직자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채용행사에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등 전자계열사의 협력사 12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내년도 의정비 인상 추진

공무원 보수 인상 2.6% 반영

광주시의회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2.6%)을 반영해 내년도 의정비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12일 의원 간담회를 열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 월정수당(2018년 3776만원·12개월분)을 3874만2000원으로 9만8000원 인상하는 안을 광주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의회는 동결, 2.6% 인상, 7대 특·광역시 평균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9.97% 인상 등 3가지 안을 두고 논의했다.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 3776만원, 활동비 1800

만원, 해외연수 여비 250만원 등 1인당 5826만원이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일종의 월급 개념이다.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정 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매달 지급되는데 동일정책제로 광역의회는 1800만원, 기초의회는 1320만원이다.

광주시는 다음 달 15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의회 요구안을 검토해 인상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의회 여성비하·폭언 도의원 윤리위 회부

전남도의회가 여성비하 발언과 폭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A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전남도의회는 12일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최근 해당 상임위 여성 위원장에게 여성비하 발언과 폭언을 한 A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총 10명 중 9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불미스런 사태에 대해 전남도민에게 죄송하다는 입장도 함께 이번 사태를 엄중히 보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은 의원들의 징계요구서가 제출되는 대로 오는 20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즉각 상정하기로 했다.

윤리위는 피해자 진술·가해자 소명 등 청문 절차를 거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위 징계 수단은 분회의 사과와 경고, 의회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가지로 최종 결정은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A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전남도 행정사무감사 도중 질의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남도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상임위 여성 위원장에게 폭언을 하고 명패·타자를 던져치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A의원은 이전에도 해당 여성 위원장에게 수차례 여성비하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파문이 일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음식 발굴·브랜드화 작업 본격화

내년 공모전·용역 발주

광주의 맛살스러운 음식을 발굴하고 브랜드화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내년 초 광주음식 공모전 개최와 브랜드화를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2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광주음식 브랜드화 자문단’ 회의를 했다. 광주음식 브랜드화를 위한 자문단은 시의회, 음식·관광 전문가, 관련 단체, 대학교수, 언론인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앞으로 광주음식을 브랜드화·상품화하는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외래 관광객들에게 광주의 음식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광주시는 광주음식 브랜드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기획단에서 마련한 추진 분야별 사업계획(안)을 이날 자문단 회의에 상정했다.

사업안을 구체화해 우선 내년 초에 누구나 참여 가능한 ‘광주음식 공모전’을 개최하고 지역 대표 음식을 선정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광주지사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가 아닌 능력을 바라볼 때,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 장애인 취업 알선
-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 중증장애인 인턴제
- 장애학생 취업 지원

기업지원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 장애인 고용시설자금 지원
-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 보조공학기기 지원
-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